

「맑은 물 공급정책」 실현 가능한가

새 정부가 지난 7월 15조원의 예산을 들여 97년까지 대부분 상수원의 수질을 1~2급수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힌 맑은물 공급정책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항간에서는 정부가 환경실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구체적인 검증없이 국민의 수돗물불신을 해소키위해 임시방편으로 발표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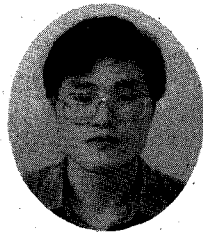
수질개선대책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환경관련 투자 재정문제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쏟아져 나와 15조원의 자금마련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환경처는 내년부터 특별소비세의 15%를 무조건 환경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환경특별회계를 제정키로 했으나 경제기획원의 반대로 내용이 대폭 수정된채 법안마저 95년 이후로 유보됐다.

또 지방양여금중 환경개선 비용 부담을 현행 17%에서 28%수준으로 높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천정화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내무부측이 강력 반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밖에 환경세 도입과 LNG에 대한 환경오염부담금 등이 불가인 상요인이라는 덮에 걸려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투입키



李光煥
(국민일보 사회부기자)

로 책정한 15조원의 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3조2천억원 지방비 6조5천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조여원의 재원마련이 어렵게돼 맑은물 공급대책 역시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부가 5개년간 추진하고자 수립한 수질개선 정책에는 재원조달 방안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맑은물 공급정책은 수돗물에 대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시설을 개량함과 동시에 지방상수도의 경영개선등 물공급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장구, 다원화 돼있는 물관리행정의 일원화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백9개소를 확충, '97년까지 하수처리율을 현재 37%에서 73%로 높이고 공해공장의 이전집단지화 및 영세 축산농가의 폐수정화시설 설치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급배수관 2만여km를 교체하는 한편 녹슬지 않는 상수도관을 의무화하고 저수조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질개선 및 수돗물 생산의 기술적 제약요소인 난분해성 폐수처리와 고도정수처리기술 등 18개의 기술개발과제를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국고를 보조해 위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오염방지 사업내용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환경기준 목표가 과학적 절대치에 근거하기 보다는 행정목표로 정해져 있어 달성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상수원의 수질관리기준은 정수시설과 음용수 수질기준을 바탕으로 정립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점,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매립지의 오염원 및 대기오염관리가 언급되지 않은 점, 수질관리대책과 상수원보호구역내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방침에 따른

정책상충 등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같은 점은 정부가 지난 89년 9월 수돗물과동을 계기로 3조5천억원 투자계획아래 4년간 추진해온 맑은 물 공급정책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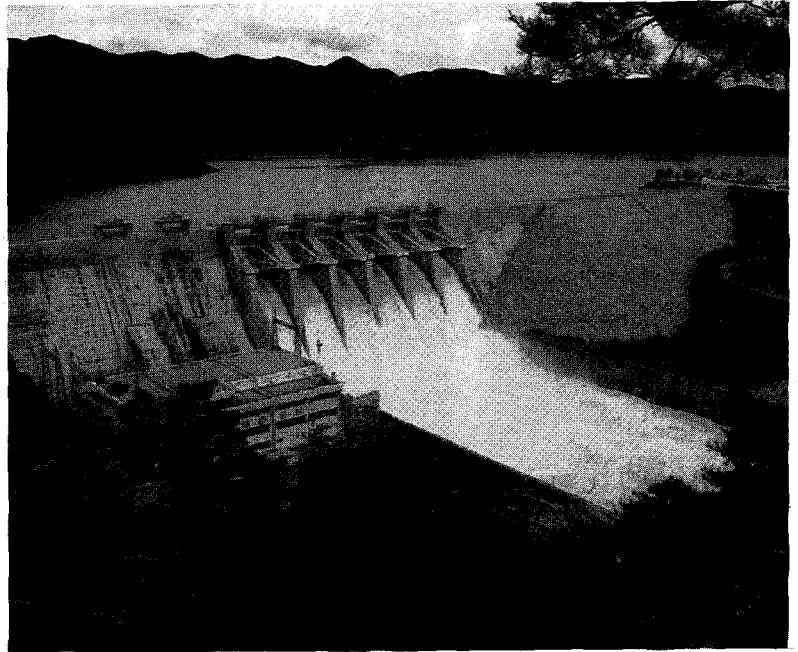
정부는 89년 당시 전국하천을 1백73개 구역으로 구분해 91년까지 1백17개 지점을, 97년까지는 전수역을 1~2급수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환경처가 올해들어 전국하천을 1백95구간으로 나눠 오염현황을 측정한 결과 목표대비 환경기준 달성률은 17.4%에 그쳤다.

또 하수처리율에서도 89년 28%에서 65%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나 90년 31%, 92년 37%로 높아졌을 뿐이다. 결국 기존 11개 하수처리장에서 27개가 추가 건설되고 79개 처리장이 건설중에 있는데도 생활하수의 급증을 예상하지 못해 하수처리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수질은 92년말 현재 한강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3.6ppm, 낙동강 3.3ppm, 금강 3.2ppm, 영산강 5.6ppm등을 기록, 2~3급 수준으로 89년 이후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共의 물정책이 각종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기에만 급급, 「事後樂方文」식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새정부는 이에 따라 맑은 물 공급정책을 전면 수정, 97년까지 15조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율을 73%로 상수원수질을 1~2급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93~97년동안의 맑은 물공급 5개년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97년이후 전국 5백54개 취수지점 대부분은 별도의 정수처리 없이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새정부는 이에 따라 맑은 물 공급정책을 전면 수정, 97년까지 15조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율을 73%로 상수원수질을 1~2급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93~97년동안의 맑은 물공급 5개년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97년이후 전국 5백54개 취수지점 대부분은 별도의 정수처리 없이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는 이 약속마저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물정책에 관한한 막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설정 위주의 발표단계를 벗어나 실현가능한 쪽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게되기를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이다.